무자격자 운영·급여 부당청구·가짜환자 유치

요양병원 불·탈법 대대적 수사

광주지검 정황 포착

검찰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당수 요양병원이 ▲무자격자에 의한 병원 운영 ▲요양급여 부당 청구·가짜 환자 유치 등 불·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20일 광주시 남구 B요양병원 등 광주·전남지역 19개 노인전문 요양병원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 병원은 광주지검 본청 관할 구역 내 14곳, 순천지청 관할 구역 내 5곳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현재 42개의 요양병원이 개설돼 있으며, 이중 3곳은 휴원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 요양병원에 수사관들을 파견, 진료기록부와 병원 개설 당시 관련 장부와 인·허가 서류, 입원 환자 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요양병원의 ▲요양 급여 부당 청구 ▲환자 유인 행위 ▲가짜 환자 유치 ▲무면허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원·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또 요양병원이 양로원 등에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 환자를 유치했다는 첩보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관내 6개 요양병원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6개월간 병원마다 300만~2천만원 가량의 요양급여가 부당청구된 것으로 드러났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요양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의료인 보유 기준 등 개설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7월 1일 장기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되면 현재 입원환자들이 부담하는 한 달 평균 입원비 80만~100만원 가운데 15~20%만 본인이 부담하면 입원이 가능해져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입원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면서 최근 노인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광주와 전남지역에 노인 요양병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환자 유치, 입원비 할인 등 출혈경쟁을 벌이는 등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세버스 차량 연식 위조 수사 확대

광주지역 초·중학교의 소풍·수학여행 차량 입찰 과정에서 일부 전세버스 업체들이 차량 연식을 위조하고 있다는 의혹<본보 4월 28일자 7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최근 광주지역 일부 전세버스 업체와 여행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을 당한 업체는 차량 연식 위조와 이를 통해 수학여행 입찰에 참여한 횟수가 다른 업체들보다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식 위조 등의 횟수가 많은 업체의 경우 조직적으로 차량 연식을 위조해 학교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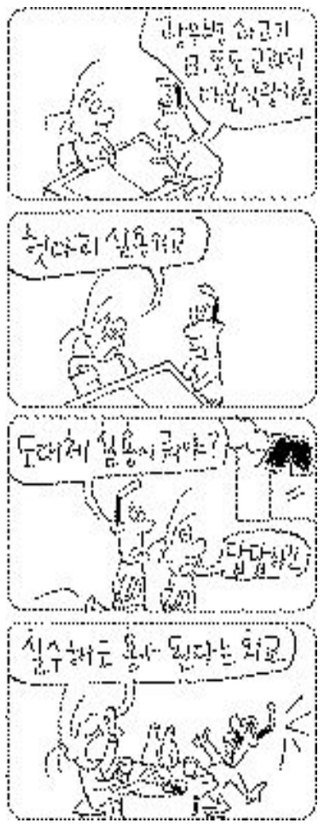
한편, 검찰은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광주지역 268개 초·중·고등학교의 최근 3년 동안 소풍·수학여행과 관련한 위탁용역업체 계약 서류와 당시 사용됐던 관광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 등록증 위조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와 학교 관계자들 간에 묵인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

인사 비리 의혹 관련 영암군청 압수수색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0일 영암군청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 영암군청 A과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9월 6급에서 5급 승진 인사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투서를 접수하고, 이날 인사담당 공무원과 해당 공무원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등 4명을 이날 오후 검찰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나운찬 〈7511〉 김종두



5·18 차량시위 재연 2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중항쟁 '민주기사의 날' 기념식에 참가한 '민주기사동지회' 등 200명의 택시 운전사들이 1980년 5·18 당시 차량 시위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옛 전남도청까지 4.3㎞ 구간을 차량으로 행진하면서 5월 정신 계승을 다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괴소문 네티즌 처벌해 달라"

손재홍 광주시의원 수사 의뢰

손재홍 광주시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을 처벌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손 의원은 20일 "사생활과 관련된 근거없는 괴소문을 퍼뜨린 네티즌들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지난 16일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어 "확인되지 않은 비방과 추측이 확대 재생산되는 등 정도가 지나쳐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오는 7월 초로 예정된 광주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일부 네티즌들이 '사회복지시설 설립 비리 등 의혹에 연루된 의원이 의장직에 오르는 것은 안된다'는 등 자신을 겨냥한 비방 글을 광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잇달아 게재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고통을 모를 것"이라며 "익명성을 담보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네티즌들로 인해 의정 활동은 커녕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손 의원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인터넷에 글을 올린 네티즌의 IP 추적 등에 나섰다.

/김지을기자 dok2000@

총선 투표소 난동 집유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20일 총선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총선 투표일인 지난달 9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사회복지관 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투표용지를 찢고 송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

'BBK 제기' 정봉주 의원 징역 2년 구형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정봉주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 영역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대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다른 어느 죄보다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후보가 구속되거나 기소될 것 같아서 김경준씨 변호사가 사임했고, 검찰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김경준씨의 자필 메모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김씨 주가조작에 김백준씨와 이 후보가 관여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는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가 법정 맨 앞줄에 앉아 공판을 지켜봤다. /연합뉴스

광주 두번째 참여재판

검찰 항소 포기

지난 14일 국민참여재판에 기소돼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광주지검은 20일 "유사사례에 대한 일반 재판에서의 양형과 범행 동기,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 열린 2건의 국민참여재판 모두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 형량이 확정되게 됐다.

김씨는 지난 3월1일 밤 10시10분께 순천시 황전면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이웃인 허모(47)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목을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불륜 자백하라" 11시간 감금·폭행

쌍나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상대 남성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서행.

○…20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S(45)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자신의 집으로 K(36)씨를 불러 "내 아내와 한 행동을 다 알고 있다"며 불륜관계를 자백하라고 11시간 동안 감금·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S씨는 지난해 11월께 카드 발급 문제와 관련해 아내와 K씨와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이 우연히 녹음된 것을 듣고 내연관계로 오해해 폭행.

○…S씨는 폭행·감금 이후에도 수차례 K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동료에게 알려 사회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는 등 협박해 결국 K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 /최권일기자 cki@